

MB 정권, 광주시장·구청장 제압하려 했다

국정원 등 문건 확인...전국 지자체장 31명 '국정저해세력' 광주·전남 강운태 등 4명...부처 동원 예산 불이익 등 압박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 최영호 광주남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 등을 포함, 전국 야권 자치단체장 31명을 국정저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제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했던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28일 밝혔다.

민주당 적폐특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야권 자치단체장 31명을 국정저해세력으로 낙인찍고 압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제압대상 야권 단체장 31명 중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은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박병중 고흥군수 등 4명이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적힌 강 시장의 '주요 국정 저해 사

례'는 ▲지역중복세력이 주축한 6·15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인도적 대북의약품 지원 및 2015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촉구 ▲좌파 인물 중용(취임후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 4명 전원 좌파 인물) ▲단체장임에도 지역 좌파 모임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으로 지속활동 ▲좌파세력 규정 참여 등 활동공간 제공 확대 등이 주요 국정 저해 사례라고 문건에 적혔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나로호 관련 대정부 비난여론을 조장하면서 국정을 저해했다고 이명박 정부는 규정했다. 문건에는 박군수가 고흥군 나로호 어민회 등을 접촉할 때 나로호 발사실패를 정부책임으로 전가하며 '발사지가 호남이어서 어민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담겼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인 탓에 문건 작성을 위한 단체장 동향 수집에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 또는 기타 조력자들이 있었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 적폐특위는 이명박 정부가 사찰

을 통해 야권 단체장 31명을 국정 저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동원,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기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예산에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교부세, 훈포장 선정에 영향을 주고,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예산삭감 등 실질적 제재장치를 가동하도록 했다.

감사원에게는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해 이른바 중북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을 점검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적폐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경찰, 청와대가 집권기간 치밀한 각본 아래 관권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 공영방송인 KBS를 장악하고 탄압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서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 긴장완

화"를 위한 국회의 조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각 정당 대변인들이 전했다.

일부 야당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에 문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여겠다"면서도 "향후에도 혼신이 빚어져 국민 불안이 현실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 불공정·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문제와 관련,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안 맞다"며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 긴장완

문대통령 "전작권 가져와야 북한 우리 더 두려워할 것"

국군의날 기념사

美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구체적 시기 결정될 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사적 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사적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기는 군대가 되어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열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연말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고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시기와 관련, "미국 측과 연말부터 배치한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협의 상황에 따라 배치될 것이고 시한이 연말이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동맹 강화·상설 국정 협의체 구성

靑·4당 '안보상황 대처' 5개항 공동발표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27일 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위원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와 각 당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2년6개월여만이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 긴장완

화"를 위한 국회의 조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각 정당 대변인들이 전했다.

일부 야당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에 문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여겠다"면서도 "향후에도 혼신이 빚어져 국민 불안이 현실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 불공정·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문제와 관련,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안 맞다"며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조기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

제2차당위 최고운영위원회의 선거전략 논의

국민의당은 28일 국회에서 제2차당위 위원회 최고운영위원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당위 산하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2차당위 혁신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며 "위원장 한분 한분의 어깨에 당의 명운과 미래가 걸려있다"고 독려했다.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인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내년 6·13 지방선거 로드맵을 만들어 각 시도당이 체계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조기공천 위주로 공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제2차당위 공동위원장은 "이긴 놈이 다 해먹는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제2차당위 정선"이라며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첫

걸발이 돼야 한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힘과 뜻을 한데 모아 이런 과제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제2차당위는 국민을 위해 준비된 빈 배다. 따로 다리를 놓을 요량이 아니라면 반드시 배에 탑승해야 강을 건널 수 있다"며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믿음과 응원, 격려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제개정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당이 선거를 코앞에 둔 작년 2월 창당이 돼 완벽한 준비 없이 시작됐다"면서 "고비마다 당헌당규 제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창당 정신이 제대로 유지됐는지 확인하고 기초를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정당혁신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3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때의 신뢰를 뛰어넘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농림지역 도시지역 토지 276평 감정가 83,000,000 최저가 5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조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청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당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